"저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CEO"

李 대통령 워싱턴 도착

19일 밤 한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후 (현지 시각·한국 시각 17일 오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설명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17일) 특별기편으로 워싱턴에 도착, 이곳에서의 3박4일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19일 밤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

◇11억8천만달러 규모 투자유치 성공=이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 세계 유수의 5개 기업과 총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경기도 부천과 충북 충주, 부산 신항만 배후 물류지역 등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 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고 부동산 개발업체인 '코자'는 국내 도시형 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1억4천만달러 등을 투자키로 약정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투자해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 정책을 소개하며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당부했다.

"훌륭한 투자가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수한 CEO를 찾는다"는 '기업인 원칙'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저는 확고한 비전과 경험, 그리고 강한 실천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라며 "여러분의 성공은 곧 한국의 성공이다. 모두 한국에 적극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한국의 노력 중 하나가 적극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전략이며,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중대 결정 내릴 수 있다=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힘써보자고 말하고 싶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발전적 관계 형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CNN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밝히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CNN을 시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전해들었다. 만약 김 위원장에게 내 말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힘써 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위원장, 남북관계 개선 중대결정 내릴 수도"

■ 삼성특검 '관련자 전원 불구속 기소' 종료

사회적 파장 고려한 고육책

로비의혹 '면죄부 수사' 비판…형평성 논란 부를듯

조준웅 삼성의혹 특별검사팀이 17일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기소'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각각 계열사에 끼친 손실이 크고, 포탈한 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전원 불구속 기소 '고육지책'=특검팀이 의혹 관련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한 것은 재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의 영향력과 사회 공헌도 등을 감안해 선처한 조치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히 이 회장과 관련해 '이 회장이 재산을 차명관리한 것은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세금 회피 행위나 배임 범죄와는 다르다'는 해명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전략기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지금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이라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을 반드시 구속수사할 필요성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의 신분상 도주 우려가 별로 없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임죄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경제범죄인 점, 천문학적 액수인 1천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전원 불구속 기소'는 여타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전망이다. 특검도 재벌에 약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삼성특검도 '무용론' 대열에 끼나=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의 '쌍끌이' 특검으로 시작한 특검 제도는 모두 8번 운용됐다. 9년 동안 거의 매년 한 차례씩 특검 수사가 있었던 셈이다. 이번 특검은 시작일 기준으로는 역대 7번째, 종료일 기준으로는 'BBK 특검'에 이어 8번째다.

하지만 역대 특검 중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준 것은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낸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정도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평가다.

이 때문에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가 너무 쉽게 가동되고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해 법을 도구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삼성특검팀이 99일 간의 수사 끝에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비자금 등 몇몇 핵심 대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용론이 일지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송두율 교수 국보법 위반 무죄

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협의를 적용한 원심부분은 파기했다.

송 교수는 1993년 8월18일 독일국적을 취득했는데, 1994년 3월 방북한 행위도 국가보안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상고심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상태를 벗어나는 행위인데,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5차례의 밀입북혐의(특수탈출)와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

■ 의혹 투성 이한정 당선자 실체?

고향 화순… 광주일고 졸업했다 속여

학력·경력 위조, 거액 특별당비 납부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한정 당선자가 전남 화순 출신인데다 정당 공보물과 당 제출 서류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화순 출신인 것은 맞지만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김동민 창조한국당 공보특보는 "이 당선자가 광주제일고 입학·재학·제적·졸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원대 석사 학력도 학교에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며 기타 경력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이 씨가 유권자에게 송부된 정당공보물에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기재했으나 이들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16대 총선에서도 민주국민당 후보로 나섰을 때도 광주제일고 졸업증명서와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외국 국가원수와 찍은 사진을 합성해 선거 홍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청원 대표 집 압수수색 영장

비례대표 수사 급물살… 야권 긴장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자의 공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서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야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서 대표의 서울 상도동 자택과 퇴계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앞서 검찰은 16일 양정례 당선자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했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1번인 양 당선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가 거세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균열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전력 의혹에 대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17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정면돌파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구태 정치와의 차별화를 강조해 온 정당으로서 검찰 수사에 의해 이 당선자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당선자 학력 및 경력 위조, 범죄 사실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창조한국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정국교 당선자(6번)가 주식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본인이 분명히 해명한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 당선자는 특별당비 1억원 납부와 함께 10억원을 당에 전달했다 돌려받은 것을 놓고도 구설수에 오른 상태인데다 손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우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했던 손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